

공정위, 정몽규 검찰 고발... 계열사 20곳 고의 누락 의혹

(HDC 회장)

누락 회사 자산 규모 매년 1조 이상 사실 인지 후에도 자진 신고 안해 제도 신뢰성 훼손 행위로 판단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 회장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HDC(구현대산업개발)는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1999년 현대 그룹에서 친족 분리한 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2018년에는 HDC 중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C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 동일인 이자 HD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정자료 제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자료 제출 대상 친족도 2021년 기준 21명 수준으로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락 회사들은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자료 준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 실무진은 친족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율이 30% 이상 인지 여부를 문의했고,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은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정 회장은 일부 회사 지분 상황까지 언급하며 친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1년 이후 HDC가 누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당시 다른 기업집단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고, 공정위도 지정자료 제출 양식을 강화해 친족회사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음잔디 과장은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점검했지만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 들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누락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된 시점에 동일인의 매체가 17년간 맡아온 HDC 계열회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누락된 회사 중 하나인 컨스트랄레는 외삼촌 일가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HDC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다.

정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돌았다.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 동안 HDC 계열회사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포함됐더라도 HDC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 과장은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aT, 농축산물 할인 '유통업체 꼼수' 막는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가동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7일 aT에 따르면 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aT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로 ▲행사 직전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판매 ▲정부지원 할인을 미준수 ▲1인 할인한도 초과 동일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정산

요청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aT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통업체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하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남,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내달 30일까지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

한남은 17일 민생경제안정과 에너지 복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남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이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방문 접수, 콜센터(1688-248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경기 여건과 정부의 민

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난방요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만7000세대에 5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3월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정산 방식 대신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난방비 고지서 제출과 검증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최근 2개년 평균 지원 실적을 반영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기 AI 전환 위해 현장밀착 훈련사업 추진

산업인력공단, 운영기관 5개소 선정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훈련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AX)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운영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교육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AI 솔루션 기업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거쳐 ▲티쓰리큐 ▲심플랫폼 ▲제네시스 ▲비앤비솔루션 ▲파인더이 등 5개 AI 솔루션 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실제 업무를 분석하고 AI 활용 가능성을 진단한 뒤, 기업 핵심 업무에 맞는 AI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이후 AI 솔루션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직무 훈련(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 재직자들이 실제 업무 데이터 활용과 AI 적용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정개발비와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포니랑 놀자"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체험' 재개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렛츠런파크 서울의 '포니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포니체험 프로그램은 작은 말 품종인 포니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가을 때 회차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동절기 동안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프로그램이 봄을 맞아 다시 문을 열었다.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내 포니체험라운지에서 시간대별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한번에

기후부, 해상풍력법 26일 시행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된 '충남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 /뉴시스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영향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